

[산업경제]

지방투자보조금,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 -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 과 '고용창출 규모' 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 따라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게 된다.
- 보조금 지원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충남·충북·강원 집중률 : ('10)57.5% → ('11)40.7%

○ 또한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전기업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투자(5%)	입지(20%) 투자(7%)	입지(40%) 투자(10%)	투자(7%)	투자(10%)

* 기업의 부지매입 비용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입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기업 인센티브 적용은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적 산업기반과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조자료 : 지방투자보조금(지식경제부 1, 25.)

작성 : 임형빈(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문의 : 041-840-1164 (hbyim@cdi.re.kr)